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5.5.(화) 5월 1주차 (제26-31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관세) 美 USTR, 301조 강제노동 공청회 동향 및 주요 쟁점 ····· 2
- (에너지) 美『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동향 ····· 5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경제) 美 1분기 GDP 2% 성장…중동 분쟁 여파 속 AI 투자 확대 효과 ····· 8
- (통상) USTR, 202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베트남 '우선대상국' 지정 ····· 9
- (관세) 트럼프 대통령, EU산 자동차 관세 25%로 인상 언급 ····· 9
- (무역) 美 싱크탱크, USMCA 공동 검토 앞두고 자동차 업계 대응 필요성 제기 ····· 10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입법 동향) 중국 견제, 관세, 조달 규정, 공급망 등 총 5건 ····· 11
- (경제·통상 행사) 301조 조사 청문회 등 총 5건 ····· 12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3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14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5.5(화)	• 3월 미국 무역수지 (U.S. trade balance)
5.6(수)	• 4월 민간고용 (ADP employment)
5.7(목)	• 5월 1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Initial jobless claims)
5.8(금)	• 4월 미국 고용보고서 (U.S. employment report)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관세) 美 USTR, 301조 강제노동 공청회 동향 및 주요 쟁점

■ USTR, 강제노동 관련 60개국 대상 301조 공청회 개최

■ 관세 부과 vs 국제 협력 놓고 산업계·노동계·정부 간 입장 첨예하게 대립

1. 개 요

□ USTR,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착수 및 공청회 진행

• **USTR은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대응 수준을 조사 중이며, 공청회 개최(4월 28~29일)**

- 동 조사는 강제노동 제품 수입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 최근 대법원 IEEPA 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대체 관세 수단 마련 차원에서 추진
- 업계·노동자·인권 단체·미국 정부·외국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충돌

2. 상 세

□ 산업계·노동단체는 관세보다 협력 중심 접근 필요 강조

• **산업계 및 노동단체는 관세보다 협력·기술 지원 중심의 단계적 접근 필요 주장**

- 강제노동 규제는 시간·자원 집약적 정책으로, 일괄적 관세 부과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기업 비용 증가 및 공급망 왜곡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지적
- 각국의 강제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유도한 뒤, 이행 수준과 정책 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일정 기준 미달 시에만 제한적 제재를 적용하는 방식 제안

• **수입업체 부담 증가와 관세 효과성 한계 지적**

- 관세 부담은 외국 정부가 아닌 미국 수입업체에 전가돼서 비용 대비 실익 부족하다고 지적
- 광범위한 관세는 수입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강제노동 기준을 준수한 기업까지 동일한 부담을 지게 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공급망 추적 등 규범 준수 비용은 타국 규제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생
- 강제노동 생산·미국 유입·상업 피해 입증 부족으로 301조 적용 정당성 논란

□ **보복 관세 및 대외 협상 영향 우려**

- **대중 관세 조치 확대 시 보복 가능성과 수출 감소 리스크 제기**

- 농업 분야는 대중 보복 관세로 과거 수출이 76% 급감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도 관세 갈등 시 농산물 구매 중단이 발생하는 등 수출 감소 위험이 지속

- 면화 산업은 중국의 10% 관세로 수출 약 90% 감소한 사례 존재

- **미·중 협상에 미치는 영향 우려**

- 미·중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구매 확대 및 관세 완화 논의될 예정이나, 301조 조치가 협상 지렛대가 아닌 협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차·식품 등 일부 소비재는 중국 의존도가 높고 대체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제기

□ **관세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 수단**

- **국제 협력 기반 노동환경 개선 및 성과 평가 기준 전환**

- 노동부 산하 국제노동국(ILAB) 등 해외 노동환경 개선 프로그램 확대,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모범 사례 공유·국제 협력 플랫폼 구축

- 단순 수입 차단이 아닌 노동자 임금 회복·착취 감소 중심으로 효과 측정

□ **관세 필요성 주장 측 입장**

- **일부 제조업 및 보호무역 단체는 관세 필요성 강하게 주장**

-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CPA) 소속 경제학자는 강제노동이 숨겨진 보조금처럼 작용해 가격 경쟁을 왜곡하고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

- **정책 제안**

- 관세와 함께 수입쿼터(TRQ), 수입 라이선스 등 정략적 수입관리 수단 병행, 면화·태양광·철강·수산물 등 강제노동 고위험군 산업 중심으로 규제 강화 필요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및 관세법 307조 집행을 보완하는 포괄적 대응 필요

- 중국 기업의 제3국 생산 이전 등 우회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3. 해외 반응

□ 301조 조사에 각국 반박, 규제 권한·실효성 논쟁 부상

- (중국) 중국국제상회는 미국 조사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으며, 타국에 미국식 규제 정합성을 강요하는 사실상 의무로 작용한다고 비판

  - 관세 부과 시 WTO 규범 위반 가능성과 조사 목적이 기존 관세 대체에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및 중대 문제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위반 소지 제기

- (인도 등) 미국이 301조 적용 요건인 비합리적·차별적 조치 및 대미 무역 부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

- (기타) 멕시코·인도네시아·에콰도르 등은 청문회에서 강제노동 대응 관련 자국 정책 및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제도적 대응 노력 강조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폴리티코(4.29), 인터내셔널 트레이드(4.28), 인사이드(4.29)(4.30) 등 종합

(에너지) 美『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동향

- 트럼프 정부,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 강화 추진
- 석탄·천연가스(LNG)·석유·전력망 인프라 등 5대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지정
- 에너지부에 구매 및 장기구매계약, 금융 지원, 생산능력 확충 등 집행 권한 부여

1. 개요

□ 트럼프 대통령,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총 5건의 대통령 결정문에 서명 (4.20)

- 국방물자생산법(DPA)*에 근거,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에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국 내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할 폭넓은 권한을 부여

  * The Defense Production Act (DPA) of 1950 (Pub. L. 81-774)

□ 트럼프 행정부는 DPA를 활용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

-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전력공급 부족 문제가 핵심 국정 과제로 부상한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

2. 상세 내용

□ 배경

- 지난 '25.1월 대통령 행정명령(EO 14156)을 통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 미국의 에너지 생산·운송·발전 역량 부족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DPA(303조)에 근거한 대통령 결정문 5건을 일괄 발령
  - DPA 제303조는 특정 산업자원·소재·기술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나 적시에 공급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구매 보장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통상적으로는 의회 사전 통보 등 절차적 제약이 존재하나, 이번 조치는 EO 14156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이러한 요건을 면제(waiver)

□ 관련 분야 및 법적 구조

• 5건의 대통령 결정문은 각각 다음 분야를 국가안보 필수 산업으로 지정

대상 분야	지정 근거
석탄 공급망 및 기저부하 발전 용량	◦ 석탄 자원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며, 석탄 기저부하 전력 부족은 방위 시설.산업 확장 및 AI 등 신기술 지원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저해 ◦ 광산, 물류, 발전소 운용 및 저장시설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
천연가스 송전·처리·저장·LNG 용량	◦ LNG 용량이 미군 작전 유지 및 동맹국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 ◦ 파이프라인·압축·처리 플랜트·지하저장·LNG 액화·수출 터미널·배급 인프라 전반 포함
국내 석유 생산·정제·물류 용량	◦ 석유가 미군·산업기반·핵심 인프라에 주요 연료원 ◦ 생산·파이프라인·저장·해양 터미널 등 지원 대상에 포함
전력망 인프라·장비·공급망 용량	◦ 노후화된 전력망이 국가안보에 위협 ◦ 변압기·고압 송전 부품·전력 전자·차단기·보호계전기 등 국내 생산 절실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의 개발·제조·배치	◦ 엔지니어링·부지 취득·초기 단계 리스크 완화 금융·국내 제조 용량·지원 인프라 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역량 확보

[자료] 백악관 대통령 결정문 참고

• 개별 대통령 결정문은 다음 3가지 내용을 공통 포함

- (1) 해당 분야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자원·재료·핵심기술 품목임을 결정
- (2) 금융 제약·규제 지연·시장 장벽 등 해소를 위해 국가 전략적 지원의 필요성 결정
- (3) 정부의 구매·구매 약정·생산능력 개발 금융 지원 등이 실효적 수단임을 결정
- (4) 에너지부 장관에게 구매·약정·금융 수단의 집행과 연방관보 게재를 명령

□ 재원 및 지원 수단

• **(재원)** '25년 OBBBA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에너지.인프라 재투자 프로그램' 폐지, 해당 예산을 '에너지 지배 금융 프로그램'*으로 이전한 재원 활용

* 에너지부에 '28년까지 약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에너지 산업 지원 예산 배정

• **(지원 수단)** DPA 제303조 하에서 정부는 다음 금융·지원 등 수단을 활용 가능

- (1) **구매** : 정부가 에너지 자원·장비를 직접 구매
- (2) **구매 약정** : 민간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구매 사전 약정
- (3) **금융 지원** : 대출 보증, 보조금, 기타 금융 수단
- (4) **생산능력 개발 지원** : 시설 건설·확장,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 향후 계획

• 동 결정문에 따른 구체적 지원은 DOE가 다음 절차를 통해 단계적 추진 예정

- DOE 프로그램 지침(Program Guidance) 마련 ⇒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 ⇒ 자금 지원 및 구매 약정 발표 ⇒ 수혜 프로젝트 및 조달 물량 확정

3. 산업별 영향

□ S&P Global 등 분석기관은 동 DPA 조치의 산업 파급효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

• **(석유.가스)** 단기적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 업스트림 기업은 증산보다 효율화 및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추세. 다만, 구매 약정이 생산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

• **(석탄.기저부하 발전)** 직접적 수혜 예상 분야. 노후 발전소 수명 연장 및 폐쇄 예정 설비의 유지 지원 가능성. 다만, 석탄의 구조적 경쟁력 문제는 여전히 지속

• **(천연가스 LNG)** 가스 터빈 제조 및 LNG 수출 프로젝트 지원 가능. 인허가 병목 해소 기대. 중기적 LNG 수출 확대 가능. 다만, 인허가 절차 신속화 여부가 변수

• **(전력망 인프라)** 공급 부족 발생 분야. 대형 변압기 납기 지연(약 40개월) 및 고압 송전 부품 부족 등 문제 심화. 미국 내 제조 역량 확충이 핵심 과제로 부각

•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엔지니어링, 인허가, 초기 리스크 금융 지원이 주요 지원 대상.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백악관(4.20), S&P Global(4.21), Phillsbury(4.29), 블룸버그통신(4.20)

미국 경제통상 동향

(경제) 美 1분기 GDP 2% 성장…중동 분쟁 여파 속 AI 투자 확대 효과

- **미국 경제는 2026년 1분기 연율 2% 성장, AI 중심 기업 투자 확대**

- 소비는 헬스케어·금융 등 서비스 수요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 전반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

- 현지 언론은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향후 소비 위축 및 성장 둔화 가능성 제기

- **투자 중심 성장 지속 … 물가 상승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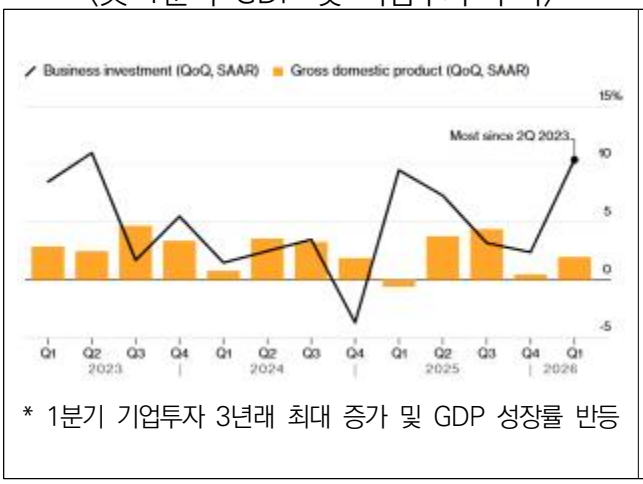
- 1분기 성장률은 소비(1.6%)와 기업 투자(10.4%)가 견인했으며, 특히 정보처리 장비·소프트웨어 중심 AI 투자 확대가 기업 지출 증가를 주도

- 민간 최종수요는 2.5% 증가하며 내수 기반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수입 증가 영향으로 순수출이 성장률을 1.3%p 낮추며 대외 부문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중동 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3월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7%, 전년 대비 3.5% 상승했고, 근원 물가도 3.2%로 올라 물가 압력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

-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으나 여러 불확실성 영향이 커진 가운데, 고용은 견조한 흐름, 기업들은 비용 상승을 반영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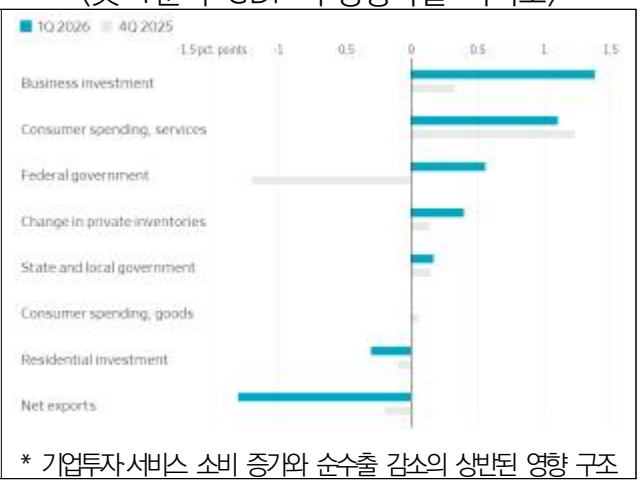
〈美 1분기 GDP 및 기업투자 추이〉



* 1분기 기업투자 3년래 최대 증가 및 GDP 성장률 반등

[자료: BEA, 블룸버그 인용]

〈美 1분기 GDP 구성항목별 기여도〉



* 기업투자·서비스 소비 증가와 순수출 감소의 상반된 영향 구조

[자료: 美 상무부, WSJ 인용]

▪ 자료원 | 블룸버그(4.30), WSJ (4.30)

(통상) USTR, 202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베트남 '우선대상국' 지정

•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수준 평가**(4.30)

- 동 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 제182조에 근거한 연례 지재권 평가로,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집행 수준과 미국 기업·창작자 등의 공정한 시장접근 여부 점검

- USTR은 100개 이상 교역국 검토 결과, 베트남을 최고 우려 단계인 '우선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총 26개국·지역을 스페셜 301조 대상으로 분류

〈2026년 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 대상국 분류〉

구분	대상국·지역	비고
우선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베트남	최고 우려 단계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
감시대상국 (Watch List)	알제리,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집트, 유럽연합(EU), 과테말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19개국·지역

[자료] USTR, 2026 Special 301 Report

• **베트남, 온라인 불법복제·위조품 등 지재권 침해 대응 미흡으로 우선대상국 지정**

- USTR은 지속적인 양자 협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온라인 불법복제·위조품 유통·무허가 소프트웨어 사용 등 지재권 침해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

- 베트남의 우선대상국 지정에 따라 USTR은 30일 이내 301조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조사 개시 시 베트남과의 협의를 거쳐 관세 등 무역 조치 가능성 제기

▪ 자료원 | USTR(원문), 폴리티코(4.30)

(관세) 트럼프 대통령, EU산 자동차 관세 25%로 인상 언급

• **트럼프 대통령, 미-EU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15%→25% 인상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공동성명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EU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트루스소셜, 5.1)

• **EU측은 미국과의 합의 사항을 이행 중이라고 반박, 관세 인상 시 대응 강조**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체결된 미·EU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따른 입법 절차*에 따라 미국 산업재 관세 철폐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

* EU 의회는 '26년 3월 자체 법안을 통과시켜 집행위·회원국과 3자 협상을 진행 중이나 입법 절차가 중단·지연되며 공동성명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

- 또한, 미국 정부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고 반박, 관세 부과 시 EU 이익 보호를 위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EU 간 협의 준수를 강조

- 그리어 USTR 대표는 EU·독일에 합의 미이행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언급하고, EU 자동차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 (CNBC 인터뷰, 5.4)

* 그리어 대표는 관세 인상은 '협상의 일부(Part of the deal)' 라고 강조

▪ 자료원 | 인사이드(5.1,5.5), 로이터통신(5.4)

(무역) 美 싱크탱크, USMCA 공동 검토 앞두고 자동차 업계 대응 필요성 제기

• **Atlantic Council은 7월 예정된 USMCA 공동 검토 결과가 북미 자동차 제조업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협정 변경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공동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 틀을 대체로 유지한 갱신 ▲3국 합의 실패에 따른 양자 합의 전환 ▲즉각적인 대체 합의 없는 갱신 실패 등 3개 시나리오를 제시*

* 협정상 검토·일몰 조항에 따라 올해 7월 1일 3국 공동 검토 예정

- (기존 틀 유지) 일부 검증·집행·원산지 기준 조정에도 북미 공급망 통합은 유지 가능

- (양자 합의 전환) 제조업체의 행정·조달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

- (갱신 실패) 북미 무역은 NAFTA 이전 조건으로 회귀해 관세 상승, 시장 접근 불확실성, 투자기간 단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

* 3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은 2036년 7월 만료 예정

- 자동차 제조업체는 생산거점 재검토, 재고 완충 확대, 이중 조달 투자 등을 통해 협정 변경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자료원 | Atlantic Coucil(4.27)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중국견제 (4.16)	S.4327 (상) (4.16)	Tom Cotton (공)	〈중국으로부터 미국 의약품 공급망 보호법(Securing America's Drug Supply from Communist China Act)〉 ▪ 중국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규제 검토를 요구하는 법안
관세 (4.28)	S.4418 H.R.8583 (상) (4.28)	Roger Marshall (공)	〈미국 농가 생산비 절감법 (Lowering Input Costs for American Farmers Act)〉 ▪ 1974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에 따라 인산 비료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모로코산 인산 비료에 대한 관세 및 상계관세(CVD)를 철폐)
공급망 (4.29)	S.4429 (상) (4.29)	Bernie Moreno (공)	〈2026년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 ▪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및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미국 내 수입·제조·판매·재판매·유통을 제한하고, 특히 중국산 차량의 수입·판매·운행 금지를 추진하는 법안
조달 규정 (4.30)	H.R.8615 (하) (4.30)	Young Kim (공)	〈조선 분야 교류·훈련을 통한 지도력 및 전문성 강화법 (FLEETS Now Act)〉 ▪ 중국의 불공정 조선 관행에 대응하여 미국 해양산업 및 조선 역량을 재건하고, 해양 규제 정비·부처 간 협력 강화·동맹국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미국의 해양 경쟁력 회복을 추진하는 법안
중국견제 (4.30)	H.R.8621 (하) (4.30)	Max Miller (공)	〈중국-아프리카 광업 투명성법 (China-Africa Mining Transparency Act)〉 ▪ 국무장관이 중국 출신 기업 중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강제노동을 동반하거나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광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목록을 매년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코발트·금·철 등 핵심 광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된 중국 광업 포함)

* 5월 5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USTR	5/5 – 5/8 10:00 am	〈Section 301 Hearings on Structural Excess Capacity〉 ▪ 美 USTR, 한국·중국·EU 등 16개 경제권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생산능력 관련 301조 조사 청문회 개최	링크
ITIF	5/5 1:00 – 2:30 pm	〈Defending Against the PRC's Techno-Economic Assault〉 ▪ 중국의 첨단산업 지배력 확대에 대응한 미국·동맹국의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링크
Brookings	5/5 2:00 – 4:00 pm	〈The future of connected cars〉 ▪ 커넥티드 차량 확산에 따른 편의성·안전성 제고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보안·책임성 등 기업·소비자 대상 정책 쟁점 논의	링크
PIIE	5/6 9:00 – 10:15 am	〈US-China trade update: Imports, exports, fentanyl flows, and beyond〉 ▪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2025년 미·중 교역, 펜타닐 유입, 무역 동향, 수출통제 정책 등 양국의 주요 현안 점검	링크
Brookings	5/15 9:00 – 10:00 am	〈North Korea diplomacy in a shifting geopolitical order〉 ▪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대북 외교 재개 가능성, 비핵화 전망 및 역내 안보 질서에 미치는 영향 논의	링크

* 5월 5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rump Accuses Pope Leo of Endangering Catholics by Opposing Iran War (트럼프, 레오 14세 교황 비판…이란 전쟁 반대에 “가톨릭 신자 위험에 빠뜨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에 반대하는 교황 레오 14세를 비판, 루비오 국무장관은 긴장 완화를 위해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과 회담할 예정
The Washington Post	GOP offers $1B for White House security, sparking dispute over ballroom (공화당, 백악관 보안 강화에 10억 달러 제안, ‘볼룸’ 포함 여부 갈등)
	상원 공화당은 해당 예산안이 보안 관련 시설 건설만을 승인하는 것일 뿐 트럼프 대통령의 볼룸 건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백악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The New York Times	China’s Big Bet on Wind Power Is Paying Off (중국의 풍력발전 대규모 투자 성과 가시화)
	중국의 보조금과 수입 제한을 축으로 한 산업 정책을 기반으로 태양광에 이어 풍력 터빈 분야에서도 사실상 지배적 위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CNN	The US said it decimated Iran’s nuclear capabilities. But satellite images show some of it appears to have survived (미국 “이란 핵 역량 크게 약화” 주장…위성사진은 일부 생존 정황)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학, 우라늄 생산시설 등 이란 핵 공급망의 주요 거점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일부 핵심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USA Today	Spirit Airlines' gift to passengers, other airlines (스피릿 항공 퇴장, 승객과 항공업계에 미칠 영향)
	전문가들은 스피릿항공의 시장 이탈이 항공권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항공사 간 경쟁 구도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미국 동부 시간 5월 5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12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232조 관세 개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4월
US26-11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2026.4월
US26-10	제14차 WTO 각료회의 주요 논의 동향 및 향후 전망	2026.4월
US26-09	美, 과잉공급·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3월
US26-08	미국 2025년 수출입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2026.3월
US26-07	2026 워싱턴 국제무역회의 주요내용 및 전망	2026.3월
US26-06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에 따른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평가	2026.2월
US26-05	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	2026.2월
US26-04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	2026.2월
US26-03	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6-02	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	2026.1월
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 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26 (2026.2.6.)		
코인시-25 (2026.1.24.)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